■ 유성구 행복누리재단

어려운 이웃 '후원씨앗' 싹 틔운다

전국 자치구 중 처음 설립… 작년 12억 모금
누구나 이웃 돕는 '나눔복지' 참여 길 열어

김 홍 혜
행복누리재단 이사장

유성구 행복누리재단. 이름이 참 정겹다. 개인적으로 이 이름을 '모든 사람이 행복을 누리게 하는 재단'으로 해석해 보았다.

지금은 그 수가 많이 늘어났지만 전국 광역시 자치구 중에서는 처음으로 설립된 복지재단이다.

복지가 아무리 다양화 됐어도 제도권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어려운 이웃이 있는 것이 우리 사회의 엄연한 현실이다.

이런 문제를 민간영역을 참여시켜 해결하기 위한 것이 바로 행복누리재단(이사장 김홍혜)이다.

출범한 지 4년이 넘어 이제 혼자서도 잘 걸어다니고 활동할 수 있는 시기가 됐다. 지난해 12억이 조금 넘게 모금이 됐고, 도움을 준 금액이 9억 3000여만 원으로 지난 4년 동안 많이 컸다.

◆복지사각 민간의 힘으로 돕는다

행복누리재단의 기부 바람은 첫 해부터 예사롭지 않았다.

설립 첫 해인 2013년에는 두 달 동안 6000여 만원을 모금했고, 2014년 5억2500만원, 2015년 7억 200만원, 2016년 8억 8700만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배분은 2013년 51만여 원, 2014년 2억6000여 만원, 2015년 5억4900만원, 2016년 9억5400여 만원으로 2016년의 경우는 모금한 액수보다 배분액이 더 많았다.

이유를 물었다.

김홍혜 이사장은 유성구행복누리재단은 유성구가 출자해 만든 재단으로 사업비전액을 유성구로부터 받기 때문에 기부해 주신 모든 현금과 현물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단다. 배분하고 남은 기부금은 전액을 다음 해로 넘겨 사용한다고 한다.

설립에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구 차원에서 재단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조례가 필요했고, 자본금 출연이 문제였다. 이 모든 것은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처음에는 의원들의 반대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허태정 구청장의 필요성에 대한 명확한 인식으로 의원들을 하나하나 설득해 나갔고 2013년부터 3년에 걸쳐 30억 원의 자본금이 만들어 질 수 있었다.

이사장을 포함해 이사 9명과 감사 2명, 현재 근무하는 사무처 직원 4명이다.

이사장과 직원들 4명이 지역 주민과 기업 등으로부터 후원을 받아 저소득층과 긴급지원대상을 발굴하고 후원하는 일을 전담한다. 가히 일당 백이다.

유성구행복누리재단에는 고액 후원사업과 더불어 대규모 후원이 아닌 500원이나 1000원을 후원하는 씨앗후원, 월급 자투리, 잔돈으로 후원하는 우수리 후원 등 소규모 후원을 적극 발굴해 받고 있다.

누구나 나눔복지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은 것이다.

대덕특구부터 대형마트, 사회복지 기관 · 단체 및 시설, 학생 자운대, 농촌마을 등 다양한 지역의 자원 및 주민 계층이 있다. 이런 다양성을 하나로 묶는 네트워크를 구성해 그물망 복지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청소년 장학사업은 물론 교육지원사업, 유성구 복지 사업 브랜드인 '행복누리봄'과 문화복지 사업 등 폭넓은 사업들을 펼쳐 나가고 있다.

장학 사업과 함께 우수한 지역 학생들이 저소득층 자녀를 가르치는 'Jumping EDU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 만큼은 모든 아이들에게 공평한 기회가 되도록 하는 사업은 특별히 눈에 띈다.

'후아유'라고 후원으로 아름다운 유성을 줄임말로 말 그대로 행복누리재단의 힘이 되는 사람들이다.

설립 다음해부터 시작한 후원금 모금 사업으로 '첫손님 가게'를 꼽을 수 있다. 가게에 첫 손님이 오면 이 금액을 기부하는 곳을 말한다.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다달이 3000원 이상 정기 후원하는 '행복천사'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통통 동전 나눔'은 유성구 어린이집 450곳에 다니는 어린이들에게 하나씩 주먹만한 저금통을 나눠주고, 1년 동안 모은 동전을 재단에 기부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애들 코 묻은 돈까지?'라는 생각을 했지만 아이들에게 작은 것도 기부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였다. 그냥 받지는 않는다. 아이들을 위한 기부 동극 등을 통해 어려운 사람들에게 잘 쓰여지고 있다는 공연을 한다.

눈여겨 볼 만한 사업 중에 하나는 긴급지원이다. 법적으로 차상위 독거노인이 젊어서 이혼 후 자녀와의 왕래가 없이 혼자 살고 있는 상태에서 주거지 마련이 어려워 아는 분의 소개로 제실 고택을 관리해 주며 무료로 제실에서 살고 있다가 주방에 불이 났다.

식생활 터전 및 주거안정 및 기초생활 유지를 위해 주방 복구 비용을 긴급지원했다.

올해부터는 정관을 일부 바꿔 유성구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재난이 생기면 그곳에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문을 조금 더 열었다.

◆유성구뿐 아니라 국가 재난도 도와

이제 지역을 넘어 주변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참 잘된 일이다. 지역 이기주의를 넘어 주변을 한 번 더 돌아보는 계기로 삼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부 정책의 그늘에 가려져 어려움을 몸으로 감당하며 지내는 계층은 항상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들에 대한 지원은 경직돼 있고 지방자치 시대라고 하지만 중앙집권적 정책추진과 예산편성 및 집행으로 인해 지방정부의 유연성은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주민들의 의식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지역주민들의 복지수요와 서비스 질(質)에 대한 욕구는 높아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풀어야 할 복지정책적 과제의 하나로 지방화시대의 복지재단이라는 전달체계의 구상이 필요 할 것이다.

재정적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복지재단을 설립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사람이 행복하고 지속가능한 복지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필요 요소인 것이다.

우선 복지재단에서는 지역사회복지로의 환경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통합사례관리로 맞춤형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하고, 제도권에서 경직된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지원대상에서 소외된 어려운 계층에게 탄력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

이제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속가능한 복지를 만들어내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모델이 필요한 시기로 복지재단을 통하여 주민과 지역사회 · 기업이 스스로 문제에 참여하고 해결해 나가는 행복공동체 네트워크를 형성해 꿈을 이루는 구민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어 나가야 할 시점이다.

유성구행복누리재단은 적절한 때에 적절하게 탄생해 적절한 일을 하고 있다.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복지정책 수립은 광역 자치단체에 맡기고 이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게 눈을 돌릴 때가 됐다.

기부 · 후원 문의 유성구행복누리재단(www.ys-happy.or.kr) 전화(042)824-7420.

interview

행복누리재단 산파역
허태정 유성구청장

"지속 가능한 복지 고민하다 창안"

– 복지재단을 설립하게 된 배경은

기존 복지정책의 그늘에 가려져 국가 차원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계층이 존재하고 있고, 이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복지수요와 서비스 질(質)에 대한 욕구는 점점 높아지고 있고, 이에 일시적인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속가능한 복지를 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 지를 고민한 결과 중 하나가 행복누리재단이었다.

– 행복누리재단은 어떤 생각으로 시작했나

대내외적 복지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기 위한 전략들을 세워야 했다.

제도권서비스에서 유연하지 못하는 부분을 유연하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했다. 법적 · 제도적 한계로 인해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없는 복지 사각지대와 새로운 복지수요 급증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사회복지통합시스템이 필요했다.

늘어나는 복지욕구에 맞추어가기에는 공공재원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자본을 확충할 필요가 있었고, 민 · 관 협력과 지역네트워크를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사회적 자본을 확보해야만 했다.

이제는 공공의 행정력, 민간의 전문성과 협치(Governance)를 통해 복지전달체계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담보해 낼 수가 있음. 그리고 지역단체간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회안전망을 만들어 새로운 복지수요에 대응해야 함.

앞으로 복지영역이 넓어짐에 따라서 보건, 문화, 평생교육, 고용, 보육 등 다양한 분야로 넓혀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 우선적으로는 취약계층을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더 나아가 지역주민들 모두가 행복을 느끼며 충만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한 지역에 집중된 복지는 또 다른 지역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 간의 상생할 수 있는 균형점을 찾아가는 것이 필요했다.

지역마다 처해진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복지도 지역 불균형이 이루어질 수밖에 한계를 극복해야 했다. 재정적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복지재단을 설립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사람이 행복하고 지속가능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전국 다른 기초단체에 이런 재단을 설립한 사례가 있는지?

2003년에 설립된 서울시복지재단을 시작으로 현재 전국의 복지재단은 40여개가 설립돼 운영되고 있고, 그 중 기초자치 단체의 복지재단은 22개가 있다.

행복누리재단이 설립될 당시 시 단위의 대전복지재단과 같은 조사연구 및 정책연구사업 중심의 재단은 다수 있었지만 지역자원 연계를 통해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 지원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재단은 자치구 중 처음이었다.

정완영 기자 waneyoung@dailycc.net